

감사원장·검사 탄핵 폭주… 野서도 “너무 해”

민주 “국민의 뜻” 핑계… 감사원·검찰 특활비도 없애 0원
내년 예산 677조도 4조 일방 삭감… “본회의 단독처리 불사”
비명계 ‘초일회’ 간사 양기대 “담대로 탄핵하면 국민 외면”

더불어민주당의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방침을 두고 각계에서 반발과 우려가 쏟아진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이라며 강행 입장을 내비쳤지만 당내에서도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바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감사원장 탄핵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1년8개월간 진행된 대통령실 판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최 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 중이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을 문제시했다.

민주당은 감사원·검찰 특소활동비도 전

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 원이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삭감 등이 ‘국민의 뜻’이라는 입장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에서 “납세자인 국민 대다수는 권력기관 특활비 전액 삭감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검찰은 발각 뒤집혔다. 정치권에 의하면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4급 과장 이상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감사원 간부들이 정치 이슈로 비상 회의를 연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지난달 2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중앙지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은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검찰 기능 유지가 위협받으면 수사·재판이 지연돼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전직 감사원장들도 우려를 표했다. 전윤철(19·20대)·김황식(21대)·양건(22대)·황찬현(23대)·최재형(24대) 전 원장은 지난달 29일 공동성명에서 “국회는 대통령실 이전 감사 등이 탄핵 사유라는데 이것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여권은 ‘입법 쿠데타’라며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절대

다수당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장·검사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동훈 대표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 마비용”이라며 “이 (삭감 예산) 중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있는데 국정 마비를 위해 호남도 버리겠다는 민주당”이라고 했다. 정해진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과하다는 지적

이 나왔다. 비명계 모임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YTN라디오에서 “감사 탄핵의 헌법·법률 정당성이 확보되느냐를 심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이게 (이 대표 수사·기소 등에 대한) 분풀이라고 국민에게 비취지면 정당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감사원장 등) 국가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이 이어지는데 힘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다. 국민적 공감을 못 얻으면 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주환 기자 jhoh@skyedaily.com

고금리·고물가 여파… 옷 사는 것부터 끊었다

3분기 의류·신발 지출 1.6% 감소… 소매판매 8개월째 내림세
패션·의류 업계 실적도 찬바람… 준내구재 소비 11개월째 ‘뚝’

소비 위축으로 내수 부진이 길어지며 소비자들이 ‘의식주’ 중 하나인 의류 구매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늦더위가 길어졌던 영향도 의류 소비 축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은 290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의류·신발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한 11만4000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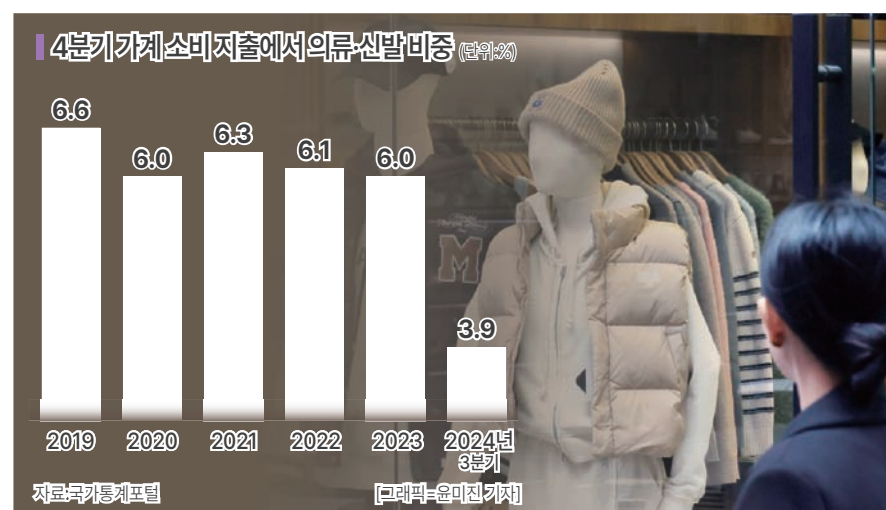
전체 소비 지출에서 의류·신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가장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의류·신발 소비 비중은 지난해 6%였다가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4.4%·5.4% 등으로 줄어든 뒤 올

해 3분기부터 3.9%까지 하락했다. 과거 2014~2016년에 7~8%를 기록했던 점과는 대조적이다.

아·식·주 중에서도 의류 소비만 줄어든 점에 눈에 띈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자 가계가 식사와 주거 대비 절약이 쉬운 의류 소비를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필수 소비로 꼽히는 주거·수도·광열 지출은 3분기 기준 1년 전보다 12.6% 늘었다. 식료품·비주류 음료 소비도 0.6% 늘었다. 의류·신발 지출은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하위 20%)에서 감소율이 13.1%에 달했다.

산업활동동향 소매판매를 봐도 의류를 비롯한 재화 소비에 찬바람이 불었다. 재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분별)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로 올해 3월(-3.4%)부터 10월(-0.8%)까지 8개월 내리 하락했다. 의복 등이 포함된 준내구재 역시 지난해 12월 1.6% 감소한 이후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기후변화도 재화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봄·가을이 사라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짧아지면서 가벼운 외투 등과 같은 옷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든 것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상품과 서비스 소비 가운데 상품 소비가 급리에 더 민감하다”며 “고금리의

영향으로 자동차·가구·의류 등 상품 소비가 부진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류 소비가 줄면서 패션·의류업계도 실적 부진에 빠졌다. 패션·의류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 줄어든 4330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10억 원으로 36.4% 줄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의 3분기 매출은 2305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 줄었다. 3분기 영업손실은 149억 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한섬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142억 원·60억 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1.4% 줄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의 3분기 매출은 2960억 원으로 6.2% 쪼그라들었고 영업이익은 21억 원으로 65.4%나 급감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러 국방 北 방문
김정은 예방도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달 30일 평양 해방탑-만경대 방문을 끝으로 1박2일 방북 일정을 마쳤다.

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러시아 국방부 등에 따르면 벨로우소프 장관이 이끄는 국방부 대표단이 전날 평양 모란봉 해방탑에 도착할 때 김강일 국방성 부상, 김정규 외무성 부상,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대사 등이 함께했다.

해방탑은 1945년 북한이 일제에서 해방되는 과정에서 전사한 소련 병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이듬해 8월15일 세운 기념물이다. 벨로우소프 장관은 김일성 주석 생가인 만경대도 찾았다.

통신에 따르면 벨로우소프 장관이 만경대 감상록에 “조선 인민에게 복리와 평화의 깃들기를, 강력한 국가 건설에 새롭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길 바란다”는 글을 남긴 후 평양 순안공항에서 노동당 국방상과 정경택 북한군 총정치국장 등의 환송을 받으며 귀국 길에 올랐다.

벨로우소프 장관이 지난달 29일 평양에 도착해 노 국방상과 회담한 후 김 국무위원장을 예방했다.

북·러 국방장관회담에선 “두 나라 군대 사이의 전투적 단결과 전략·전술적 협동을 강화해 나가는 문제”가 토의됐다고 통신이 전했다.

김정은은 면담에 이어 환영 공연과 연회까지 참석하는 등 러시아 대표단 일행을 극진히 환대했다.

구체적인 협의 사항이 보도되지 않았으나 북한의 추가 무기·병력 지원과 러시아의 대가 제공 등 군사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임명신 기자 imms@skyedaily.com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지난달 29일 접견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한국전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국가전력망은 국가경쟁력

미래산업의 성장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기본이기에
한국전력은 전력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한국전력은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하루 1원 절약하기

01.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 1.08 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0.36 kWh/일

03. 세탁기 사용 시 세탁물은 모아서 사용하기 - 0.09 kWh/일

글로벌 에너지 리더 KEPCO

국가 미래 성장 기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

취임 직후 계엄 모의... '충암파' 金국방, 尹과 직접 소통

尹대통령 충암고 1년 선배... 출세기도 달리며 핵심 실세 부상
金국방·수도권 3사령관 작년 3월 비밀 회동... 계엄설 구제화
군 일각 "金장관·여인형 방첩·박종선 777사령관 친위쿠데타"

'충암고 라인' 배후설 '술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고 국방부가 공식 확인한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관련 윤 대통령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군·경 '충암고 라인' 개입 가능성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장관은 '충암파' 핵심으로 알려졌다. 계엄 준비 의혹을 부인한 김 장관의 건의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6시간 만에 해제했다.

4일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다. 현행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전날 오후 10시40분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김 장관의 건의 시점은 전날 오전 국무회의 혹은

같은 날 오후 열렸을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국무회의로 추정되고 있다.

스카이드일리가 접한 군 소식통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김용현 국방 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부터 계엄 모의의 조짐'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육사 라인'을 언급하며 김용현 국방장관(육사 38기)·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곽종근 특전사령관(육사 47기) 등을 언급하지만 사실상 '충암고 라인'에 계엄 모의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충암고 시절 윤 대통령과 '막역지우' 한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출세 가도를 달리며 '충암파' 핵심 라인이 됐다.

최대 대통령 경호처장을 김 장관은 2022년 3월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을 맡아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일을 주도했다. 5월부터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명돼 윤 대통령 경호를 총괄했다. 올해 8월 외교안보라인 개편 인사를 전격

단행으로 취임 10개월째인 신원식 국방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빠지고, 새 국방부장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11월 후반기 장성 인사에서 국군방첩사령관에 충암고 출신 여인형 중장이 임명됐다. 충암과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는 견해와 김 장관과 여 사령관이 윤석열 군 친위체제를 구축해 인사를 좌우한다는 평이 돌았다.

당시 군 내부에서는 국방장관 위의 '국방 장관'으로 불린 게 김 장관이며 신원식 장관 체제의 '국방파'를 몰아내 상황 자리에 올랐다는 소문도 돌았다.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때에도 계엄설 중심에 섰었다. 김 장관은 후보자 때인 9월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제기하는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정치 선동" "계엄을 해도 군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김 장관은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계엄령 발령을 위한 요건이 정해져 있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발령되고 나면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라며 계엄의사를 부인했다.

실제 계엄설이 매우 구체화했던 건 김 장관과 여 사령관 간 이진우 수도권방위사령관·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간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경호처장

3일	4일
21:30 '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설이 시작	00:07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
21:50 방송사들 사이에서 '긴급 정부 발표가 있으니 중계연결을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 공유(대통령실 내 브리핑을 앞에 다수 기자들이 집결했지만 문이 잠겨 입장이 불가능, 대통령실 22시 넘어서도 '불통' 상태)	00:22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
22:23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생중계 시작(담화문 낭독 약 6분간)	00:45 계엄군 국회 본청 진입
22:28 윤 대통령, 야당 감액예산 강행 연쇄 탄핵에 비상계엄 선포	00:49 국회 본회의 개의
22:42 민주,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01:01 '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 국회 본회의 가결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야당의원 172명, 국민의힘 찬한계 18명) 국회의장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따라 계엄령 선포 무효"
23:00 담화문 전로 언론 배포	02:01 우원식 국회의장, 윤 대통령·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 보내
23:09 사진 언론 배포	04:22 합동참모본부, 비상계엄 투입 병력 원소속 부대 복귀
23:04 국회 출입문 폐쇄	04:27 윤 대통령, 생중계 담화 통해 비상계엄 선포 해제, 군 설치 계엄사령부 해제
23:25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	04:30 정부, 국무회의 열어 '계엄 해제안' 의결 발표
23:27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23시부로 발표	



언론 발표 시간 기준

공관 회동은 당시 참석자들이 한남동 모처에서 경호처 차장으로 갈아타는 방법으로 공관 출입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서부터다.

방첩사령관과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은 계엄 국면에서 방첩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 대통령 친위 부대 격인 치안 유지와 무력행사는 핵심 부대인 수방사와 특전사령부 사령관이 만난 것이다. 당시에 대해 김 장

관은 9월 인사청문회에서 "(계엄 모의) 거짓 선동과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계엄이 해제된 현재, 야권 뿐만 아니라 군 일각에서도 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충암파 책임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 장관과 여 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 등을 중심으로 한 친위쿠데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경찰청을 소속 기관으로 두는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도 충암

고 출신으로 대통령실 경비와 관련한 101 경비단장도 충암고 출신이다.

군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스카이드일리에 "비충암파이며 김 장관과 육사 기수가 10기 가까이 나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모두 장관 지휘에 의해 움직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국회 특전사 투입 전 각 사령관은 지휘관에게 '절대로 인명 피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지침을 내렸고, 실제 계엄군들이 실탄 장전 없이 국회에 투입됐고, 뛰어난 전투력에도 본회의장도 제압하지 않았다"고 했다. 제동장치 없는 비상계엄에 이루어진 계엄군 투입에 특수전사령부는 무력을 직접 사용할 의지가 없었으며 뒷선의 의중을 따랐을 뿐이라는 의미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 용산구 청사 내 집무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수 합동참모회의 의장은 이날 당분간 감시 및 경계작전 임무 외의 부대 이동은 합참 통제하에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정부는 계엄령 실패 후유증을 부정선거 수사로 돌파하라

〈1면에서 계속〉 민주당은 국민이 참고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함으로써 스스로 정당해체 조건을 만들었다. 한·미일과 중·러·북한의 안보 불력에 의한 3차 세계대전의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안보가 위중한 시기에 탄핵과 특검을 무기로 정부를 마비시켜 적을 이롭게 하는 반역은 적의 아바타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만행이다.

탈원전 자해(自害)로 성장 가능성 1000조 원전 수출 방해 사건, 100조 방산 수출도 방해하려는 듯 방산 수출 국회 동의의 무화 입법을 발의한 배경,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敵國)'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반대로 돌아서게 만든 배후 등 북한과 중국을 돕는 이적

행위를 추적해야 한다.

민주당이 계엄이 무산되었다고 계엄유발 원죄를 감추고 또 준동하면 자유 우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자유 진영의 공적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각성하고 자정(自淨)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북한군의 러시아 용병은 심각한 안보위협인데도 방관하면서 적의 동태를 분석하려는 참관단마저 방대한 자는 누구인지, 북한의 사격 제원 실험용 미사일 도발과 중국·러시아 군용기들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침범에 항의는 못하고, 장병 처우개선과 직결된 긴요 예산 삭감을 주도하여 국정을 방대한 실체는 무엇이며, 대장(大將) 출신 국회의원의 예비역장

성단을 방자한 윤 대통령 퇴진 촉구 기자회견은 참모로 의아하다.

그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게 반역 세력에 여여 아바타가 되었고, 반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굴중·종북·반미 행보를 걸던 민주당은 국정 방해를 중지하고 국익과 민생을 위한 좋은 정치로 전향해야 한다. 최종 경고를 귀담이 듣지 않고 안보 파괴를 지속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이 나서서 해체할 것이다.

민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에 대해 민주당 해체를 위한 부정선거 수사를 강력히 주문하였다. 정부는 계엄령 후유증을 부정선거 수사로 돌파하길 바란다.

군은 비상사국을 인지하고 자중하라. 미완의 계엄령 선포에 따른 반발도 심할 것이다. 비난이 쏟아진다면 상명하복의 군법리로 대응하라.

군은 국제 정세를 분석하고 대비하며 안보팀은 한반도가 전장(戰場)이 되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군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징후를 보이면 3번 강도를 자연 지진으로 파괴해야 한다. 적을 분석하고 제압할 힘을 비축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는 내부의 적으로 간주하고 5·18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권 시절, 반국가 세력과 싸웠던 애국·호국·구국 세력은 계엄령 해프닝에



이재명(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오른쪽 두 번째)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사국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위축되지 말고, 유사시에는 시니어 군복을 입고 구국의 전선에서 피를 흘릴 각오와

결기를 밝히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전면에서 나서주길 바란다.



국가전력망은 국가경쟁력

미래산업의 성장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기본이기에
한국전력은 전력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한국전력은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하루 1원 절약하기

01.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 1.08 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0.36 kWh/일

03. 세탁기 사용 시 세탁물은 모아서 사용하기 - 0.09 kWh/일

글로벌 에너지 리더 KEPCO

국가 미래 성장 기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

저성장에 거센 탄핵 역풍... 한국경제 악화일로

환율 1440원까지 치솟아... 정국 불안 장기화 조짐 비상
1%대 안정됐던 물가 꿈틀... 수입·소비자 물가 뿔발질 우려
고물가 이어지면 내수 부진 더 악화... 정부 “충격 안정” 결의

가뜩이나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우리 나라 경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정국 불안 문제까지 겹치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전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오후 종가(1419.2)대비 17.8원 오른 1437.0원에 마감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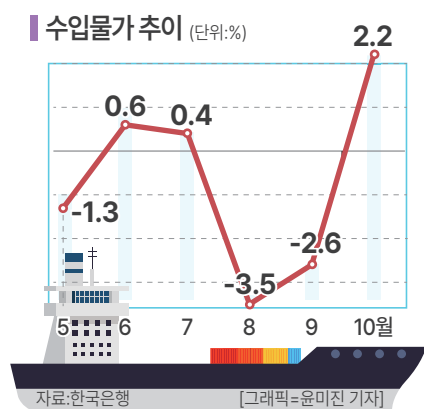
하루 사이 18원 가까이 환율이 상승하면서 정치적 이벤트에 따른 환율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환율은 계속해서 1300원대 후반 혹은 1400원대를 기록하며 달러 강세를 이어오고 있었다. 이후 비상 계엄 사태 당시 환율은 1440원까지 치솟았고 최근까지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폐기 이후 국정 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환율은 계속해서 상승세다. 10일 기준 환율은 종가 기준 전 거래일 대비 6.1원 내린 1430.9원에 출발했다.

문제는 환율 때문에 1%대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가 다시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환율의 급등은 수입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고 지표상 물가는 안정세지만 국민 체감 물가는 높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에 놓인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재선 이후 환율이 오르는 11월 수입물가지수는 10월 대비 2.2% 올랐다. 8월(-3.5%)과 9월(-2.6%) 두 달 연속 하락한



뒤 석 달 만에 반등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국 불안까지 더해지면서 환율이 크게 뛰었기 때문에 수입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

이 같은 수입물가 상승은 한 달가량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도 다시 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심지어 정국 불안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강달러 현상은 계속되고 물가도 실

제로 상방 압력을 받아 고물가가 이어진다면 길어지고 있는 내수 부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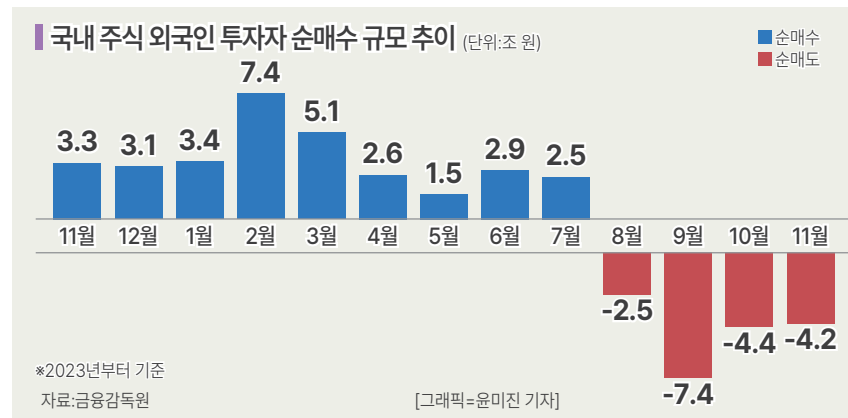
경제부처는 환율 충격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시장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정부·한국은행의 시장 대응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분야만큼은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환율은 이날 소폭 하락 출발했지만 환율 상승의 원인은 정국 불안에 있는 만큼 계엄 및 탄핵 사태가 길어지면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외국인 ‘셀 코리아’ 가속



11월에만 4.1조 원 순매도 계엄 이후 7000억대 팔아

외국인 투자자들이 11월 국내 주식 4조1000억 원어치를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4개월 연속 순매도 행진이다. 외국인 주식 비중은 올해 최저치로 떨어졌다. 비상계엄 사태 후 탄핵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인의 ‘셀코리아’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월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 4조154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8월(-2조5090억 원)·9월(-7조3610억 원)·10월(-4조3880억 원)에 이어 4개월 연속 ‘팔자’ 행진이다. 2022년 6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대형주 위주로 물량을 내던졌다. 외국인 코스피시장에서 4조2370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830억 원을 순매수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서 지난달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을 확인한 결과 삼성전자(-3조9433억 원)·삼성SDI(-3991억 원)·SK하이닉스(-3269억 원)·현대차(-2878억 원)·삼성바이오로직스(-1137억 원) 등 수출 대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미주(-1조6000억 원)·유럽(-9000억 원)·아시아(-5000억 원) 등 여러 곳에서 순매도에 나섰다. 국가별로는 봐도 영국(6000억 원)·대만(2000억 원) 정도가 순매수했고 미국(-1조4000억 원)·룩셈부르크(-7000억 원)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한국 주식을 팔아치웠다.

주식시장 내 외국인 비중은 감소 추세다. 11월 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 보유금액은 693조6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35조2000억 원 쪼그라들었다. 전체 시가총액(2534조6860억 원)의 27.4% 수준이다. 작년 11월(692조2420억 원·26.9%) 이후 규모·비중 모두 가장 낮았다.

지역별 보유 규모를 보면 미국이 279조3000억 원으로 전체 40.3%를 차지해 제일 컸다.

이어 유럽 214조2000억 원(30.9%)·아시아 101조 원(14.6%)·중동 11조2000억 원(1.6%) 순이었다.

문제는 외국인의 순매도 강도가 비상계엄 후 탄핵정국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은 비상계엄 직후 4일부터 9일까지 4거래일간 7026억 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의 이탈 속에서 코스피 지수는 이 기간 5.6%·코스닥 지수는 9.2% 각각 떨어졌다.

증권가는 외국인의 추가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과거에도 굼직한 정치적 이벤트 발생 시 3~6개월간은 사태가 지속됐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국내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속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고착화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더 부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승준 기자 syoon@skyedaily.com

계엄에 발목 잡힌 과기정통위... 과학·기술 법안 표류

계엄 정국으로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정치적 쟁점을 주로 다루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위)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관련 사안에 집중하며 과학기술 법안들은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10일 의명을 요구한 한 IT 업계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일단 국회가 다 멈춘 건 알겠는데 관련 법안들이 언제 다시 논의되는지는 알 길이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며 “지켜보고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9일 과기정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방심위원장을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지 않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하는 방심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심위원장이 법률 위반 시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법안소위가 시작하자 7일 탄핵소추 당시 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을 두고 논쟁이 있었고 여당 의원이 퇴장한 채 방심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과기정통위 전체 회의에도 여당 의원들이 불참했고 법안에 대

과방위 통과한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논의 중단 22대 국회 출범부터 과학·기술 현안 뒷전으로 밀려

국내 ICT 입법 과제

법안	내용
AI 기본법	AI 기술 육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내용. 고영향 AI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와 AI 안전 연구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
단통법 폐지안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상한 폐지에 불리한 관련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
망 무암송차 방지법	글로벌 OP가 ISP에게 합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
국가 사이버안보기본법	국가 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고 법국가적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가동하는 내용
디지털서비스 안전성법	플랫폼·디지털 인프라·통신 등 디지털 서비스의 안전 규정을 통합해 종합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자료: 국회 의원정보시스템

[그래픽=윤미진 기자]

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계엄 정국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과방위 또한 방심위 관련 법안에 집중하는 가운데 처리가 시급한 과학기술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

현재 과기정통위 의안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뉴스 기사를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거나 조회수 추천 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통신 이용자 정

보 보유기간 및 과기를 명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올라와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는 국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또한 위원회 회부 상태다.

최근 과기정통위를 통과해 화제가 됐던

인공지능(AI) 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었으나 법사위가 내린 행위 상설 특검에 집중하면서 표류하게 됐다.

5월21일 21대 국회 과기정통위 마지막 전체 회의가 방통위·방심위 현안 질의 여부로 파행했을 때부터 22대 국회에서도 과학·기술 법안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방송 이슈에 밀려 찬밥 신세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디지털 산업 관련 법안을 3건 이상 제출한 의원의 재선율이 50%를 넘지 않으며 관련 법안들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여기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방송 3법’을 비롯해 방송 관련 사안이 중점이 되면서 과기정통위에서 방송을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엄 정국이 겹치며 과학·기술 관련 법안 처리는 계속해서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종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의 내일! 에너지의 미래!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만나요!

무한한 에너지의 시작, SMR 기술

삶을 지켜주는 경제적 에너지

한계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원자력 에너지

탄핵·수사 확대에… 국방·행정·치안 마비 위기

군정권·군령권 가진 육참총장·군 지휘부 직무정지
행안부장관 사퇴 이어 경찰총장·서울청장 체포 공백
美선 한국군 통수권 우려… 핵협의그룹 등 회의 취소

군정권을 가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계엄 사태의 가담자인 수도방위사령관·특전사령관·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이 직무 정지됐다.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다수 중간급 군부도 혐의 대상에 올라 안보 공백이 현실화다.

한덕수 국무총리등 국무위원·경찰 수뇌부도 야권 탄핵 및 감경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국방뿐 아니라 행정·치안 공백이 야권이 주도하는 탄핵·수사로 마비된 것이나 다름없다.

12일 군 소식통은 “육군력은 마비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군정권을 가진 박 총장이 행정 등을 뒷받침해 줘야 군령권을 가진 예하 부대들이 실질적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군정권·군령권을 가진 박 총장과 주요 부대 사령관들이 모두 직무정지 및 배제됐다”고 했다. 이어 “당장 군사·전투 대비는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수사 대상이 늘어나고

직무 배제가 이어지면 전체적 사기 저하 및 군사대비 태세는 필연적으로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국방·안보의 혼란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박(육군 대장) 육군참모총장에 직무 정지 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과 정성우(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 방첩사 1처장·김대우(해군 준장) 방첩사 수사단장·문상호(육군 소장) 정보사령관도 직무 정지됐다.

이들뿐만 아니라 병력을 투입한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육군 준장)·김정근 3공수여단장(육군 준장)·김현태 707 특임 단장(육군 대령)도 출국금지 조치가 되어 정상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방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긴급 체포됐다. 경찰이 스스로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가운데) 육군참모총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경위 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확보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국방부와 경찰청의 수장 격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자진 사의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내란수괴죄’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의지까지 드러났다.

사실상 군 통수권·치안·안보 등 기본적

국정운영마저 혼선 속 마비 상황에 빠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외교가에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한 총리·조태열 외교부 장관·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잇달아 만나 한국군의 통수권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동맹 관계를 둘러싼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계엄 이후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이 무기한 연기됐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도 취소됐다. 이 가운데, 북한을 통해 계엄 8일 만인 11일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롱했다. 이를 두고 핵·미사일·국제 도발 등이 이뤄지면 전방에서 제대로 된 대응 태세를 꾸릴 수 있겠냐는 우려가 쏟아진다. 다만 전문가들은 합참의장이 평소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 태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정미 밀리테크협회 회장(예비역 육군 대장)은 스카이드에일리에 “감시·경계 작전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동참모본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며 “김명수 합참의장이 각 군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육군(대행)·공군·해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 또한 평소 평시 태세에 만반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계엄군으로 직무배제가 된 부대 사령관도 수방사·방첩사·일부 특수부대도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체제에서 직무대리 인사가 이뤄져 작전 수행 공백을 메꿀 것”이라고 했다.

외교·국방권 관련 송재익 전 한국국방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미 바이든 정부 국무부·국방부가 한국의 윤석열정부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며 “차기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정치 성향이 윤석열정부를 지지해야 마중 대결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유력 언론도 윤 대통령 지지 논조의 언론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태우 선진변호사협회 대표 변호사는 야당의 연이은 탄핵 소추를 ‘불법 탄핵’으로 규정했다. 그는 스카이드에일리에 “헌정부 취임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무려 25개이다. 대한민국 건국 후 74년간 발의된 탄핵소추안 숫자보다 더 많은 탄핵안을 단 2년 만에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도 변호사는 “국회가 법사위를 통한 공식적인 조사 없이 72시간 내 탄핵 투표를 강행하기에, 졸속탄핵 남발로 인한 국가의 혼란과 헌정질서의 파괴가 심화하고 있다”며 “법사위 조사는 강제하지 않고 72시간 내 의결은 강제하는 국회법 제130조 제항 및 제2항은 적법절차 원리를 파괴한 위헌 조항으로 판단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尹담화에 출당 주장… 친한마저 등돌리는 韓 ‘사면초가’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사실상 내란 자백… 제명해야” 요구
이철규 의원 등 “내란죄 단정은 경찰… 상의 후 결정해야” 지적
원내대표에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 선출로 사지 물린 한 대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원조 친윤’인 5선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다. 친한계 핵심 인물마저 한동훈 대표의 급진적 태도를 반대하는 등 한 대표는 사면초가에 직면한 형세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106표 중 72표를 득표해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대항마로 나선 김태호 의원은 34표에 그쳤다. 이를 두고 당이 사실상 한 대표에게 공격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되어야 한다”며 한 대표를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었다.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오면서 당내 분위기는 긴박하게 흘러갔다.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탄핵이 유일한 (계엄 사태)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한 한 대표는 담화가 나오자 ‘대통령 제명·출당’을 예고했다. 그는 의총에서 (담화는) 사실상 내란 자백 취지의 내용이었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 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

다. 또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한 대표가 당론이 나오기도 전에 탄핵은 물론 제명·출당까지 입에 올리자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철규 의원은 “내란죄라 단정하는 건 서두른 감이 있다. 적어도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하고 그런 결정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집권여당 대표가 야당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다.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도 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단정하며 대통령 탄핵을 촉구 중이다.

홍익표 의원은 12일 담화 직후 SNS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칭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 자유 투표를 결정해주시기 바란다”며 여당의 탄

핵 가담을 요구했다.

이에 친한계 내에서도 한 대표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동훈 체제에서 당 사무총장 등 요직을 맡았던 장동혁 최고위원은 10일 “우리는 (대통령) 탄핵을 10번이고 100번이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초중반 대통령 퇴진 대선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등을 계엄 사태 대책으로 제시했다.

장 최고가 비한계 최고위원 3명과 함께 당 지도부에서 사퇴하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정치권에 의하면 비대위원장에는 비한계 중진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장 최고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최근 밝혔다. 오주환 기자 jhoh@skyedaily.com

‘비상계엄 문건 공개’ 해킹 악성코드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정보를 사칭한 해킹 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다며 개인과 기업에 주의를 당부했다. 과기정통부 등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을 틈타 정부·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해킹 메일 또는 관련 영상이나 이미지로 위장한 악성코드 유포가 예상된다며 밝혔다.

특히 국군방첩사령부가 쓴 계엄 문건이라고 위장한 문서형 악성코드 유포가 발견됐으며 비상계엄 관련이라는 첨부파일이 포함된 이메일을 열거나 파일을 내려받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해킹 메일의 주요 내용은 ‘계엄’ 관련 정부 발표 내용이나 영상, 이미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메일을 열어보거나 첨부파일을 내려받을 경우 악성코드가 자동으로 실행돼 개인정보나 기업의 업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정수희 기자 jsh@skyedaily.com

한국전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국가전력망은 국가경쟁력

미래산업의 성장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기본이기에
한국전력은 전력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한국전력은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하루 1원 절약하기

01.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 1.08 kWh/월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0.36 kWh/월 03. 세탁기 사용 시 세탁물은 모아서 사용하기 - 0.09 kWh/월

글로벌 에너지 리더 KEPCO
국가 미래 성장 기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

계엄 쇼크에 방한 관광객 ‘뚝’… 올 2000만 유치 목표 무산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방한관광객 수 2000만 명 달성이 좌절됐다. 국내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을 맞는 데다 계엄 여파가 남아 있어 내년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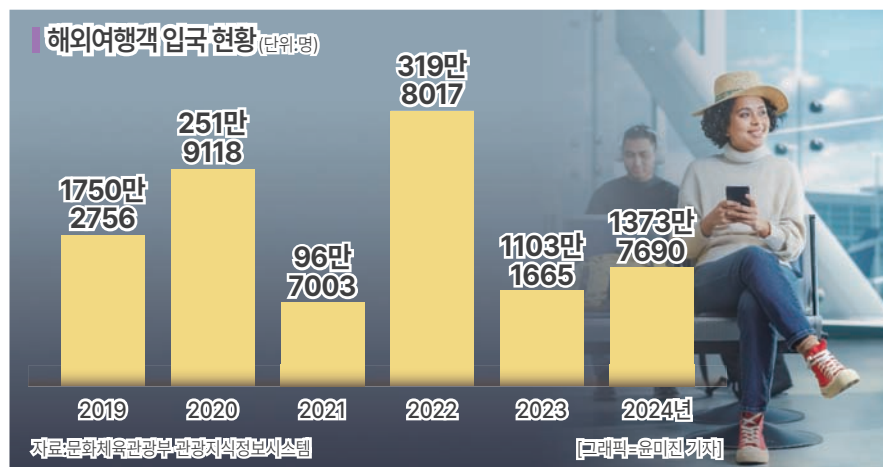
19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0월간 방한외국인은 1373만7690명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4.7% 늘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94% 회복한 수치다.

다만 목적별 입국 현황을 보면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1127만 3708명이다.

앞서 문체부와 여행업계는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매월 100만 명대의 관광객을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은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10월 방한외국인 수가 정점을 찍고 날씨가 추워지는 11월~이듬해 2월 동안 방한 외국인 수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관광 목적이 아닌 방한 외국인 전체를 통틀어 추산하더라도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약 1750만 명의 역대 최대 방한 외국인 수를 기록했던 2019년의 경우 10월에 관광 목적으로 140만3576명이 한국을 찾으면서 월별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11월과 12월에 각각 123만4503명·124만7337명



올해 1~10월 1373만7690명… 1년 전보다는 54.7% 늘어

영 등 여행주의국 분류… 수학여행 단체 관광 잇단 취소

내년까지 여파 미칠 듯… 정부 “관광지 정상운영” 홍보 총력

으로 입국자 수가 줄어들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한 추세로 월별 수치를 보면 10월 관광 목적 방한 외국인 수는 136만3685명으로 월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해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한국을 여행 주의 국가로 분류하면서 방한 외국인 이 줄어들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외국인 수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정치 불확실성에 관

광 수요가 다시 위축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계엄사태 이후 일본 수학여행 단체가 방문을 취소하고 전문 여행사를 통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던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일행이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김정은 문체부 관광정책국장도 최근 브리핑에서 “12월 초 방한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동기 대비 2~4% 줄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날씨별로 보면 비상계엄 전

과 비교해 오히려 늘어난 날도 있다”며 “오히려 내년 1분기가 문제”라고 밝혔다.

실제로 입국 관광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12월에는 100만 명대를 기록하던 방한 외국인도 70만~9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올해 12월에는 각각 관광 목적 방한 외국인이 69만6840명·77만3941명을 기록했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도 매월 100만 명대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으로 1월과 2월에는 각각 88만4293명·90만7928명을 기록했다.

여행산업 연구센터 야놀자리서치에 따르면 내년 방한 관광객은 1873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에도 2000만 명 달성의 실패가 점쳐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한국 관광지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적극 알리고 있다. 문체부는 5일 관광업계에 한국 관광지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을 각각에 전파해달라고 요청했고 한국관광공사도 한국관광 통합플랫폼 비킷코리아 등에 ‘한국이 안전한 여행지’라는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문체부는 관광공사·여행 관련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관광 상황반’을 운영하며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26일에는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해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도 논의할 방침이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美 내년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강달러 지속… 원화 약세 비상

파월, 두 차례 인하로 돌아서

연준 올 마지막 0.25%p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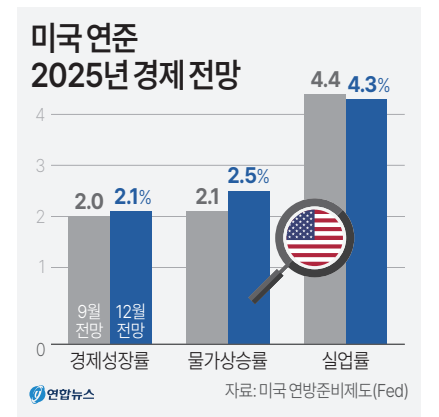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 완화에 속도 조절하기로 하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 인하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달러 강세가 지속돼 원화 약세 현상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금리 인하에 손을 놓을 수도 없다. 내수 부진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둔화하고 있다. 흔들리는 주식시장도 금리 인하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19일 한은에 따르면 미 연준은 17·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연 4.50~4.75%에서 연 4.25~4.50%로 0.25%p 인하했다. 9월 0.50%p 내리며 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뒤 11월(-0.25%p)에 이어 세 차례 연속 금리 하향 조정이다.

금리를 낮췄으나 속을 들여다 보면 긴축에 가까웠다. 연준은 9월 전망치와 비교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0%에서 2.5%로 조정했고 물가상승률을 2.3%에서 2.4%로 내렸다. 실업률은 4.4%에서 4.2%로 내렸다. 금리를 낮추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다.

점도표(향후 금리 수준을 표시한 표)도 상향했다. 내년 말 금리 전망치로 3.9%를 제시했다. 9월 전망치(3.4%)보다 0.5%p 높다. 정책금리를 통상 0.25%p씩 내린다고 가정하면 내년 정책금리를 고작 두 차례 내릴 것이라는 의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하 요건에 대해 “지금까지 정책금리를 1%p 인하함으로써 중립금리 수준에 상당히 가까워졌고 추가 인하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관련 추가 진전이 있고 노동시장 강세가 이어지는 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경제와 노동시장의 견조한 상태가 유지되는 한 추가 인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답했다.

매과 영향은 컸다. 미 국제 10년물 가격은 0.12%p 올랐고 S&P500 지수는 2.95% 내리면서 6000선이 깨졌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1.2% 올랐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이날 “불확실성이 국내 정치 상황과 결합되면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신속하게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연준이 긴축으로 돌아서면서 한은이 내달 기준금리를 내릴지 동결할지도 주목된다. 뮌박질하는 환율을 생각하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

하은행에 따르면 18일 원·달러 환율은 1451.70원으로 전월 말(1396.50원) 대비 55.2원 올랐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져 수입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다.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리 인하를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경제 악화가 극심해서다. 한은은 11월 말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8월 말보다 0.2%p, 내년 경제성장률도 2.1%에서 1.9%로 각각 내려 잡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1%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윤승준 기자 syoon@skyedaily.com

강공나선 尹…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나설 듯

崔감사원장·이창수 지검장 이어 유사한 법적 대응 유력
“사안 민감성 고려해 신중한 접근 필요” 의견도 적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인한 권한 정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을 할지 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미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재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에서 대통령 측도 유사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현재에 출석해 직접 변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가처분신청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사안의 민감

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가처분은 일부 특정 심판 절차에서만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당해산심판(제57조)에는 현재는 정당의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판결 전이라도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권한쟁의심판(제65조)의 경우 국가기관

간 권한 분쟁에서 본안 판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권한 행사를 중지하거나 일정한 조치를 명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현재는 과거에 명시적 규정 외에도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를 남겼다. 2000년 사법시험 사건(2000헌사471)에서 현재는 사법시험 응시 횟수를 제한한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현재의 심리가 규정에만 제한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는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 사회복합적 어려움 손해의 예방 필요성 △긴급성 △인용과 기각에 따른 불이익 비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집행정지규정)과 민사소송법 제714조(가처분 규정)의 기준을 따른다.

특히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재가 가처분을 기각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현재법 효력정지 가처분’ 사례는 현재가 가처분 심리를 제한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줬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심판은 사안의 중대성과 정치적 파장을 고려할 때 다른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한국전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국가전력망은 국가경쟁력

미래산업의 성장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기본이기에
한국전력은 전력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한국전력은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하루 1원 절약하기

01.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 1.08 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0.36 kWh/일 03. 세탁기 사용 시 세탁물은 모아서 사용하기 - 0.09 kWh/일

글로벌 에너지 리더 KEPCO
국가 미래 성장 기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

전농, 북송 실패 트랙터로 ‘내란급 시위’… 무법천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에워싸고 평화 위장 체포 촉구 시위
경찰차 벽에 돌진 위험… 인도 폭주하는 아찔한 상황까지
탈북자 “北선 트랙터 기름 없어 미사일 이동 수단으로 전용”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경찰차 벽을 뚫고 한남동 관저 바로 앞에서 체포 촉구 시위를 벌인 로더 부착 트랙터들을 두고 ‘평화 위장 시위’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재인정부 당시 북송될 계획이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트랙터들은 북한에서 보통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농기계다. 평화 시위의 외피를 입은 무력 시위나 다름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지난해 9월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참석한 가운데 정권 수립(9·9절) 75주년 민방위 무력 열병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략 무기 대신 트랙터·트럭 등의 장비가 주로 등장했는데, 농기계인 트랙터가 무기를 끄는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열병식에 방사

포·대전차 미사일을 매단 트랙터 등 계량된 군사 장비를 선보여 관심을 끌었다. 북송 탈북자는 본지에 북한에서 트랙터는 원유 부족 문제로 보통 농기계보다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며 미사일 무기 이동 수단 혹은 개조 후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로 사용된다고 알려졌다.

좌편향·종북 논란의 중심에 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등이 구성한 ‘전농준투쟁단’은 1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 30여 대·화물차 60여 대를 전국에서 동원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까지 체포 촉구 시위를 하기 위한 ‘상경 투쟁’을 했다. 이들은 21일 서울 초입인 남태령에 진입하며 1박2일인 29시간 동안 경찰 차벽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투쟁단 측 인원 2명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으며 로더를 단 트랙터가 경



지난해 9월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정권수립 75주년 민방위무력 열병식이 열렸다. 사진은 군사용으로 개조한 트랙터이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찰차 벽을 위협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 트랙터는 인도로 질주하기까지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야권 의원들이 경찰청 직무대행을 만나 차벽을 해체했고 전날 오후 4시 투쟁단은 오후 7시까지 트랙터 10대를 몰아 한남동 관저 앞에서 한 시간 동안 시위를 한 후 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의 시민이 뿔뚝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여초커뮤니티 등을 통해 동원된 인원과 일부 중국인 및 진보당 인사들이었다.

문제는 해당 트랙터들이 2019년 문재인



21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 일대에서 포착된 전국농민회총연맹 측 트랙터가 경찰 차벽을 위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당시 전농에서 북송하려다 유엔 대북 제재에 걸려 실패한 ‘통일 트랙터’들이었다는 것이다. 해당 트랙터들은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이기 때문에 당시 북송에 실패하여 민간인 통제구역 도라산역 물류창고에서 보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심주일 탈북기독교인회 사령관은 “트랙터는 북한에서 매우 중요한 군사 장비로 활용된다”며 “트랙터를 가지고 대통령실 앞을 포위한다는 게 총칼만 안 들었지 문을 직접 부수버리겠다는 각오가

아니었겠느냐”고 되물었다.

립일 탈북작가는 “북한에서 농기계인 트랙터는 ‘강한 혁명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전쟁이 나면 농기구인 트랙터를 몰아 김정은을 결사옹위하고 한국과 미국에 대항하자는 정신을 각인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사령관도 “현재 북한에서 사용하는 트랙터들은 매우 노후화했는데 남한에서 온 새 트랙터를 농민에게 나눠줄 경우 체제 결속이 와해했을 것”이라며 “해당 트랙터들을 농민이 사용하겠다면 북한에 넘기겠다고

한 것 자체가 무리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시위야말로 ‘내란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투쟁단이 ‘농민’이 아닌 ‘전문 시위단’일 것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근거는 △전국 농민들이 가져온 트랙터의 모양이 동일하고 새것이고 △투쟁단의 구성원 및 이들의 성명 등이 농민과 어울리지 않은 전문 시위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투쟁단의 트랙터 로더에 붙은 ‘대북 제재 해제’가 농민과 상관 없는 슬로건이고 △전농 등을 에워싼 종북 정치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시민은 “현재 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장 현직 대통령 체포를 위해 트랙터로 서울 진입하면 이게 내란이지 과연 뭐가 내란이라는 말이나”고 되물었다.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은 글을 올려 “진작에 금지 통고해놓은 무차별 트랙터 시위를 차벽 세워서 막아놓으니 트랙터를 끌고 경찰 버스를 막아버리고 인도까지 올라와 우리 (경찰청) 직원들한테 돌진하는 범죄자 농민들을 옹호하는 시위대는 제정신이나”고 지적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정치·관치 외풍… 역대급 실적에도 침울한 은행

野선 ‘가산금리 산정 내역 공개’ 은행법 개정 본격 추진
횡재세 도입도 들먹… 정부는 상생금융 카드 다시 꺼내

은행권이 역대급 실적 전망에도 웃지 못하고 있다. 이자이익을 많이 낸 만큼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미 시작됐다. 야당은 가산금리 산정 내역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은행이 7000억 원을 부담하는 소상공인 대상 ‘상생금융’을 꺼내 들었다. ‘횡재세’ 도입도 여전히 위협 요인이다. 실적 저하를 앞둔 은행에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23일 본지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를 확인한 결과 올해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 전망치는 총 16조92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순이익(15조1367억 원)을 11.8% 넘어선 규모다.

지주별로 KB금융 5조654억 원·신한금

융 4조8577억 원·하나금융 3조8691억 원·우리금융 3조1323억 원이다. 1년 전보다 각각 11%·8.5%·11.6%·19.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수익이 실적을 주도한 듯하다. 이자 수익의 합계 전망치는 104조9917억 원으로 작년 말(100조6418억 원)보다 4조 원 이상 불어났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따라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예대마진을 확대한 결과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7월 0.43%p에서 8월 0.58%p·9월 0.74%p·10월 1.05%p로 석달 연속 경종 뛰었다.

이자 기반 호실적 행진에 정치권은 규제

의 칼을 들이대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가산금리 산정 세부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율 영역에 맡겨 은행들이 알아서 정하는 가산금리 책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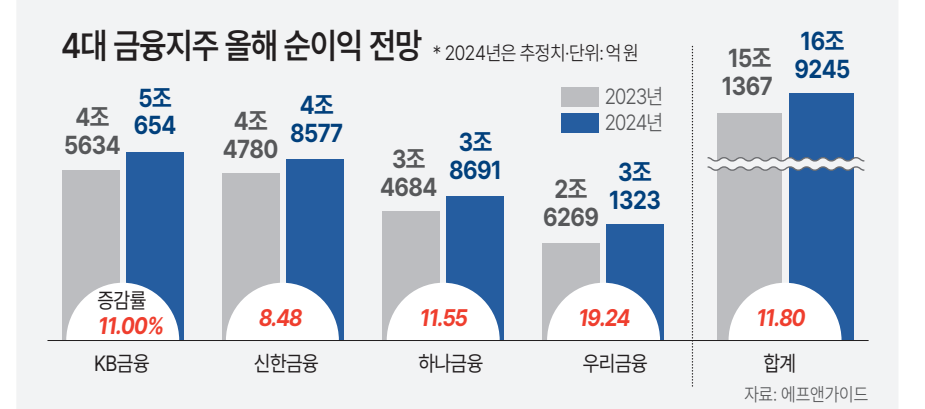
은행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을 반영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다음 우대금리 등 가감조정금리를 빼 대출금리를 산출한다. 가산금리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비용(리스크·유동성·신용프리미엄) △대출 취급에 쓰이는 비용(업무원가·법적비용) △은행 자체 마진율(기대수익률) 등으로 구성되는데 어떤 근거로 책정했는지는 영업기밀이란 이유로 공시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공시제도를 법률로 규정해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

치는 세부 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해 대출 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차원으로도 ‘가산금리 원가 공개’를 당내 기구인 민생경제회복단의 검토 과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주의를 표방하는 현 정부도 은행을 비틀기는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은 이날 은행들이 6000억~7000억 원을 부담하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이 대출 이자부담 경감으로 4260억 원을 지원하고 신규 자금공급 재원으로 2000억 원을 출연하도록 할 계획이다.

야당 중심으로 횡재세를 발의할 수 있는 점도 여전히 크다. 민주당은 작년 11월 금융사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을 시 초과 금액의 최대 40%까지 기여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의 금융소비



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올해 22대 총선 전후 횡재세 재추진을 움직임을 보였는데 대통령 궐위인 상태라서 민주당이 횡재세 법안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

문제는 정치권 압박이 가파르거나 어려운 내년 은행 실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국내은행의 순이익 전망치는 22조5000억 원으로 올해 전망치(23조5000억 원)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평가사인 나이스신용평가는 은행의 내년 실적 전망에 대해 ‘저하’를 제시했

고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는 은행업 사업환경에 대해 ‘중립’을 전망했다.

업계 반응은 부정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대출계수는 조절이 필요할 때 우대금리를 줄이거나 가산금리를 올려 조절하고 있어 가산금리 원가 공개는 큰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은행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횡재세의 경우에도 시장을 역행하는 법안이다. 금리라는 게 올라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는데 현재처럼 금리가 인화되는 시기에는 적절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승준 기자 syoon@skyedaily.com



국가전력망은 국가경쟁력

미래산업의 성장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기본이기에
한국전력은 전력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한국전력은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한국전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루 11월이 01.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 1.08 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0.36 kWh/일 03. 세탁기 사용 시 세탁물은 모아서 사용하기 - 0.09 kWh/일

글로벌 에너지 리더 KEPCO
국가 미래 성장 기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

“계엄은 내란” 선동 앞장… 조·중·동 절독 쓰나미

윤석열 정부 친편일률적으로 악마화… 박탄핵 다시 보는 듯
편파보도 항의·구독해지 요구 전화 쏟아져 감당 못 할 지경

‘조중동’으로 통칭되는 조선·중앙·동아일보 구독자들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본지가 런칭한 유튜브 채널은 하루 만에 구독자가 1만 명을 돌파하면서 보수 언론의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는 듯한 양상이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통의 보수 언론으로 꼽혀왔던 조중동 3사는 구독을 끊는 절독 전화가 쇄도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구독자의 절독 전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취지로 본지에 알려졌다.

조선일보 절독율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권순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조선일보 구독을 취소한 독자가 30만 명 정도 된다고 폭로했다.

전체 발행부수가 100만 부가 채 안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무려 30% 정도의 독자가 등을 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자들의 이탈율이 증가하고 있어 내부에서 비상이 걸렸”다고 했다.

동아일보 관계자도 “절독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내부에서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본지에 말했다. 동아일보는 한때 구독문의 전화를 막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만 하면 절독을 요청하기에 하는 수 없



‘조중동’으로 통칭되는 조선·중앙·동아일보 구독자들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스카이드일리

이 번호를 차단한 속사정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는 jtbc의 아니면 말고식 보도에 강한 불만을 품은 시청자가 신문 절독에 나서면서 연일 항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는 뉘드리가 들린다.

이 같은 조중동 탈러시는 유능한 기자들

이 몰지각한 기사를 쏟아내는 데 대한 국민의 분노가 표출된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온다.

조우석 평론가는 “계엄 실패 이후 돌아

가는 현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한치도 다르지 않다”며 “당 대표를 포함한 집권 여당 내부에 배신자가 등장하

고 야당이 어부지리를 쾅기는 구조, 그리고 끝내 국회에서 대통령을 졸속 탄핵 시도하는 과정까지 놀랍도록 닮았다”고 촌평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이게 다 언론이 부채질하는 난리통이라는 점이고 제2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자 제2차 언론의 난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조중동은 어쩌면 그렇게 친편일률적으로 윤석열정부를 악마화하는지 끔찍하다”고 한탄했다.

조 평론가는 “윤 대통령 탄핵을 촉발시킨 데도 조중동의 역할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을 두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돌린 것이라고 내란 행위로 몰면서 선동을 시작한 것도 조중동이었다”고 질었다.

그는 “그러나 조중동이 민주당의 원죄, 즉 국가파괴행위는 언급하지도 않는다”며 “8년 전 조중동이 보였던 광란의 심연

을 우리 모두 기억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인민재판식 보도가 지금은 과녁을 바꿔서 윤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똑같은 장난으로 윤 대통령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마 찬가지”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에 따라 “지금 믿을 곳은 중립적인 논조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시각을 다루는 스카이드일리밖에 없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구독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본지는 유튜브 채널 론칭 하루 만에 구독자가 1만 명을 돌파하며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본지 관계자는 “아직 정식 오픈이 아닌 단계이지만 읽어주는 유튜브 뉴스 서비스로 놀라울 만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독자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겸 기자 kh@skyedaily.com

작년 폐업사업자 100만 명 육박… 역대 최다

경총 ‘폐업사업자 특징·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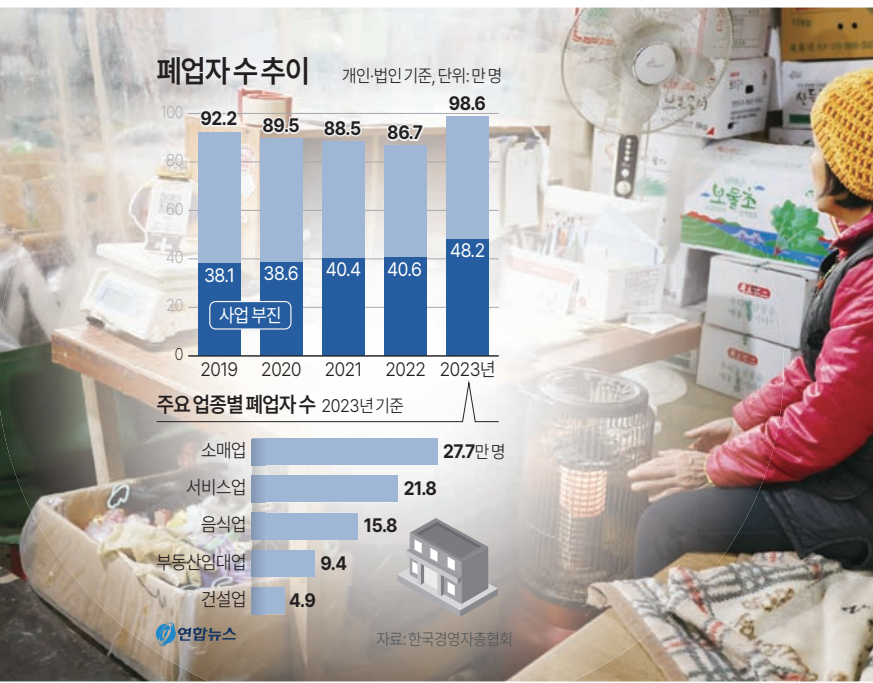
작년 폐업 코로나 때보다 많아

고금리·최저임금 부담 누적 탓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했다.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소매업 등 서비스업 폐업률이 높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폐업사업자가 98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3.7%(11만9000명) 증가하면서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2020년(89만5000명)·2021년(88만5000명)은 물론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인 2008년(84만4000명)·2009년(84만1000명)보다 많다.

지난해 폐업률은 9%로 2022년(8.2%) 대비 0.8%p 상승하면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2020년 폐업률은 9.4%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각각 8.8%·8.2%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반등한



것이다.

폐업한 사업자를 업종별로 보면 14개 업종 중 △소매업 27만 7000명 △기타 서비스업 21만 8000명 △음식업 15만 8000명 등의 폐업자 수가 많았다. 폐업률 기준으로도 음식점이 16.2%로 가장 높았고 소매업(15.9%)이 뒤를 이었다.

경총은 음식점의 폐업률이 높은 이유와 관련해 진입 장벽이 낮아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고, 최저임금미만율(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37.3%에 이를 정도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진단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도 제조업 등 타 업종

대비 낮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매출 규모로 봐도 상대적으로 영세한 개인사업자인 ‘간이사업자’의 폐업률(13.0%)이 일반사업자(8.7%)나 법인사업자(5.5%)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대비 간이사업자 폐업률이 다른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폐업 사유별로는 폐업 사업자 중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사업자 비중이 48.9%로 가장 높았다. 이는 2010년(50.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다음으로 폐업 사유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기타’ 사유(45만1000명)와 양도·양수(4만 명)·법인 전환(5000명) 등으로 집계됐다.

경총은 “최근 경기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높은 인건비 등 영향이 이어지면서 사업자들이 경영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규 창업 촉진·내수 활성화 등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생계형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및 교육 강화·실패 후 재도약 기반 마련 등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머라이어 캐리 매년 ‘캐럴 연금’ 수십억

최근 스트리밍 20억 회 돌파

크리스마스 관련 최고 기록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55)가 한 곡으로만도 매년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바로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것은 오직 당신)이다. 크리스마스 시즌의 대명사가 된 이 곡에 대해 25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가 빌보드지 추정치 등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캐리는 2022년 이 노래 한 곡으로 270만~330만 달러(약 39억4000만~48억2000만 원)를 벌었다고 전해진다.

이런 수치는 주로 노래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등에서 거둔 수입으로, 수익성이 더욱 높은 TV 특집 프로그램 방송 등에 관련된 수입을 제외한 것이다. 다만 CNBC에선 캐리 본인과 음반사 등이 저작권 계약 내용을 공개한 적 없어 정확한 수입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1994년 발매 이후 30년간 꾸준한 열기 속에 오히려 차트 역주행으로 인기가 높아져

캐리의 실제 수입을 올려 줄 것이라고 짐작했다.

세계적인 음원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에는 최근 이 노래의 스트리밍 20억회 돌파를 전했다. 크리스마스과 관련된 노래 가운데 최초 최고 기록이다. 스포티파이에서 2016년 이래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스트리밍 1위를 차지해 왔다. 음악 산업 시장조사업체 루미네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이 곡의 미국 내 오디오 스트리밍 횟수가 총 2억4900만 회, 2019년의 1억 6700만 건 대비 약 49%p 늘었다.

버클리 음대 교수이자 독립음반사 라이코디스크의 전 사장인 조지 하워드스는 이 노래에 대해 “돈 찍어내는 기계” “그야말로 엄청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 곡이 연간 200만~400만 달러(약 29억 2000만~58억4000만 원) 매출을 일으킨다는 분석이다. 음악산업 전문 법률사 무소인 ‘매넷 펠프스 & 필립스’는 이 곡 음원 매출을 연간 340만 달러로 추산하면서 지난 30년간 총수익이 약 1억300만 달러(약 1503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임명선 기자 imms@skyedaily.com

에너지의 내일! 에너지의 미래!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만나요!

무한한 에너지의 시작, SMR 기술

삶을 지키는 경제적 에너지

한계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원자력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주

“尹 지키는 게 자유대한민국 수호”… 애국우파 ‘체제 전쟁’

광화문 광장 곳곳서 체제수호로 대의명분 점차 선화
“헌법 수호” “부정선거 OUT” 등 새 구호 적힌 팻켓 늘어
종북세력 인지전 맞서 ‘탄핵 찬반→체제 지키기’ 필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막기 위한 애국 보수 우파 시민 모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기에 처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 붕괴라는 초유의 상황을 극복하자는 데로 대의명분이 달라지고 있다. ‘대한민국 체제 지키기’라는 새로운 어젠다 세팅이 이루어진 모습이 서울 광화문 광장 곳곳에서 목격됐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주최 측 추산 300여만 명이 모인 광화문 광장 일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대규모 집회에는 ‘헌법 수호’ ‘STOP THE STEAL’ ‘부정선거 OUT’ ‘입법 독재 반대’ 등의 새로운 구호가 적힌 팻켓시위의 모습이 포착됐다. 직전 집회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내란 무효’ ‘내란죄 주범은 민주당’ 등 집권 여당과 야권을 겨냥한 팻켓 문구가 주종을 이뤘다면 이번 집회부터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관련한 문구들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문-올해 1월1일 관저 앞 지지자 새해 메시지 등에 등장한 ‘반대한민국 세력’ ‘주권 침탈 세력’ 등의 의미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정 질서에 대항하기 위한 세력을 구체화하여 ‘체제 전쟁’으로 2차전이 불붙고 있다는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라 했으며 올해 신년 인사에서는 “나라 안팎이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협에 처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공통된 결론을 두번의 담화문에서 냈다. 친중·친북 주사파의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에 대한 모습이 현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언급되며 국가 체제 위기감이 현실화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주사파 척결,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민혁명대회를 열고 있다. 대국본

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보수 집회 참여자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었다. 한 참여자는 “현 대한민국은 종북주사파들의 국군 해체와 보수

분열을 통한 공산주의로 급행열차를 탄 모습”이라고 했다. 이들은 ‘자유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 등을 외쳤다. ‘STOP THE STEAL’ 즉 ‘STS’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

제를 그만 도둑질하라는 의미로 새로운 ‘어젠다 세팅’이 된 모습이었다.

곳곳에서는 ‘대한민국 체제 위기’ 관련 각종 소책자와 설명문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회천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가 쓴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대추나무)가 현장에서 널리 읽히고 있었다. 30페이지 분량의 책자에는 △첫째, 대한민국 앞에 닥친 위기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무너지는 체제 위기, 국가 위기라는 점 △둘째, 체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체제 세력의 실체와 전략 전술과 야군의 실상과 전략 전술을 확실히 익혀야 할 것 △셋째, 위기를 깨닫고 지피지기 배운 사람들은 국민 깨우기 운동(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우파 시민은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을 ‘내란 주범’으로 상징하며 이들이 저지른 ‘헌정 폭거’의 근거로서 △야당의 졸 탄핵 리스트 △안보와 행정에 쓰인 예산 삭감 내역 △헌정 질서와 국헌 문란의 내용 등에 대해서 공유하며 관련 규탄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윤 대통령을 지키자는 목소리가 종북주사파들과의 체제 전쟁을 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조짐이 새해 첫 집회에서부터 주류로 자리

매감한 것이다.

우파 집회 자리를 지킨 윤의철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예비역 육군 중장)은 내전 양상을 띠며 평행선으로 진행되는 현 집회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의 문제에서 ‘체제 전쟁’의 영역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본지에 “종북·친북·친중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역사·교육·법률·여론·언론·선전선동사이버 조작전(戰) 등 총체적 인지전 중‘이라며’자유민주주의의 최대 강점인 민주시주의 절차적 과정을 이용해 국민에게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사실상 둔갑시킨 하이브리드·초한전을 수행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이 같은 내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 하므로 윤 대통령이 헌법의 마지막 수단인 계엄령을 발동해 저들과 내전을 선포하고 국민에게 이를 주지시키며 깨닫게 하교자 한 것”이라고 했다. 윤 교수는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해 온 저들이 짜놓은 인지전의 영역에서 전쟁 시 우파는 연전연패할 것”이라며 “이들이 만들어 놓은 장을 벗어나 새롭게 싸울 수 있는 전략·전술을 구성하고 그 의도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혜원 기자 hyang@skyedaily.com

민주노총 ‘무법천지’… 흥기 마구 던져 경찰 부상·혼절

빠앗은 무전기 경찰 머리에 던져… 경찰 “응급 호출”
“언론 민노총 폭력 취재 안 하나” 본지에 고충 토로
민노총, 의식 잃었는데도 “조합원 체포” 적반하장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화했는데도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불법 기습시위에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이 둔기를 던져 경찰관이 일시 혼절하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중부상이나 사망 경찰은 없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노총은 일체의 사과 없이 대통령 체포를 강행하겠다는 초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둔기에 맞은 경찰관은 일시 혼절해 응급차에 실려 병

원에 입원했으며 차도가 있어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관 혼수상태’라는 취지의 글은 경찰관이 폭행당해 쓰러지자 동료들이 다급하게 응급 지원을 요청하고 최초 상황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5일 “무기명 블라인드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이 올라왔지만 중부상이나 사망 경찰관에 관해서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본지에 답변했다. 또 다른 복수의 경찰 관계자도 “기절 후



4일 민주노총 조합원이 던진 둔기에 맞은 경찰관이 쓰러지고 있다.

제보자 제공

입원한 것은 사실”이라며 “(서울청) 기동대 소속 인원이 다쳤다”고 밝혔다. 한남동 현장에서 만난 다른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서 민노총의 폭력 상황 취재 안 해줘 억울하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역시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찰 차벽으로 구급차 들어오기도 힘들어 긴급상황에 더 큰 일이 발

생할지 우려된다”고 본지에 말했다.

의명을 요청한 복수의 병원 관계자는 “무전기로 내려찍어 기절 상황인 것으로 안다”며 “뇌사는 지주막 출혈 등을 통해 뇌의 중추가 망가지는 상황”이라며 “CT(컴퓨터 단층촬영)를 찍은 후 판단할 수 있어 어느 정도 강도만으로 뇌사가 있

었는지 없었는지는 쉽게 판단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앞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경찰로부터 빠앗은 무전기로 추정되는 둔기를 경찰관에 게 던졌다. 이 둔기를 머리에 맞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혼수상태라는 주장이 담긴 제보가 자정을 전후해 본지에 속속 접수된 바 있다.

본지는 즉시 사태 파악에 나선 결과, 서울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팀과 수사팀 관계자 2명은 5일 새벽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관 피해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의식불명 상태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신중히 답변한 바 있다.

본지에 접수된 제보들에 따르면 경찰로 추정되는 계시자는 4일 익명 계시판 ‘블라인드’에 글을 올려 “우리 직원 머리 맞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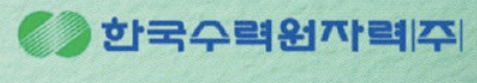
서 혼수상태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소방청의 사건 접수 단말기에 ‘코드제로0’(최단 시간 내 출동)로 경찰이 소방 당국의 출동을 요청한 내역을 찍은 사진을 본지에 제보했다.

‘코드제로’는 소방청이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해 긴급 출동하도록 요청하는 정보 단계다. 경찰은 4일 오후 6시 18분 “대통령 관저 뒤쪽 민노총이 경찰을 때려서 경찰이 의식 불명 대통령 관저 뒤쪽 민노총 해산시켜 달라”고 서울소방본부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기록됐다.

한편 민주노총은 4일 낮 12시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이를 가로막는 경찰과 극렬하게 대치했고 이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해 국민적 반감을 부추겼다. 이들은 관저에서 200~300m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행진한 뒤 경찰이 저지하자 집기 등을 던졌고 경찰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폭행 등)로 조합원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허경·장혜원 기자 kh@skyedaily.com





에너지의 내일! 에너지의 미래!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만나요!



무한한 에너지의 시작, SMR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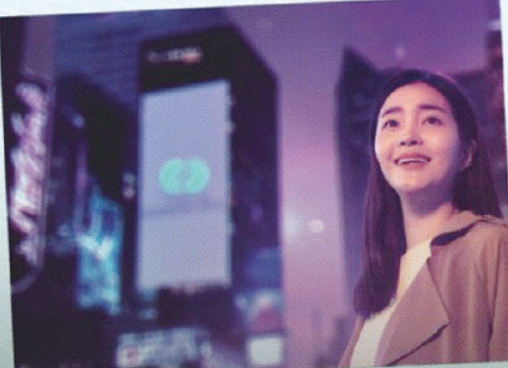




삶을 지켜주는 경제적 에너지









한계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원자력 에너지



일선에선 매 맞는데... 경찰 고위급, 민노총 뒤봐주나

1박2일 집회 시한 지나도 전세버스 10대 숙박 농성 중
트랙터 시위 때처럼 野 의원 움직여 압력 넣었을 가능성
육교 오르내리는 것까지 통제하는 대국본 집회와 대조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지속되면서 경찰의 처신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노총과 격 시위로 다치는 일선 경찰들과는 달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뒤에서 봐주는 고위 경찰들이 있는 것 같다”는 불만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불법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민노총이 “직접 관저 문을 열겠다”며 3일부터 6일까지 영장이 만료되는 날까지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노총 측은 일선홀 앞에 전세버스 10대에서 20대를 정차해 숙박 장소로 활용하며 ‘귀빈 농성’ 논란을 일으켰다. 4일 오후 해당 장소를 경찰이 열어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최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서울 서초구 남태령 일대 경찰차

벽을 뚫고 한남동 관저 바로 앞에서 시위를 벌인 사건도 경찰의 물리선 태도와 관련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3일 시작된 민노총과 윤석열 측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윤 대통령 체포·구속 촉구를 위한 집회는 애초 1박 2일로 예정됐으나, 공수처 체포영장이 만료되는 이날까지 노숙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민노총은 3일 오후부터 한강지역 인근 일선홀을 기점으로 철야 농성을 시작했다. 당시 3개 차로를 집회 신고했으나 10차선을 가득 채우며 이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민노총 조합원 2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신자유연대는 이틀보다 나을 앞선 지난달 31일 공수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부터 이날까지 지하철 6호선 한강진



5일 오후 10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 일대에서 민노총 측 윤석열 체포 지지 집회가 열리고 있는 한남초육교 남단 부근에서 빨간색 동그라미는 집회 장소이며 초록색 동그라미가 민노총 버스 정유한 구역이다.

스카이데일리

역과 국제루터교회 일대에서 밤샘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당초 1박 2일로 예고된 민노총 측 집회가 장기화되면서 대국본 측은 민노총 측에 맞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공수처 관계자뿐만 아니라 관저 턱밑까지 올라온 민노총 시위 캠프를 방어하고 있다. 한남초 인근 육교를 사이에 두고 약 400m 정

도 떨어진 곳에서 윤 대통령 지지·퇴진 집회가 이어지고 있었으며, 기자가 찾은 현장에는 양 집회 사이에 500여 명 가까운 경찰이 충돌 방지를 위해 배치돼 있었다. 수십 대의 경찰차가 동원되어 긴 차벽을 세운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대국본·신자유연대 측은 4일 오후부터 경찰이 한남초 육교까지 민노

총에 길을 터준 바람에 대치가 강대강의 극단으로 치달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차 저지선을 뚫어준 경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일선홀을 중심으로 민노총은 가로 3차선, 세로 50여 m 구역을 점유하며 20여 대의 전세버스를 세워 놓고 이를 쉼터로 활용했다. 해당 버스들은 ‘숙식 장소’로 활용되며 ‘귀빈 시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부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일부 건물의 허가를 받기도 했다.

이 구역을 경찰이 4일 오후 갑자기 열어줬다는 제보가 나왔다.

일선홀 뒷 구역을 지키며 민노총 집회를 소상히 관찰한 A 씨는 “이유도 없이 경찰이 길을 열어줬다. 한남초 육교 앞 바리케이드도 몇 번이나 뚫릴 뻔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5일 낮에 민노총 인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바리케이드를 넘어 관저를 열겠다며 올라오는데도 이를 방관하는 모습도 목격됐다”며 “오죽하면 젊은 친구들 수백 명이 경찰을 못 뚫겠다며 직접 바리케이드 앞에서 민노총 인사들을 막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처음부터 일선홀 뒷 구역

을 터주지 않았으면 민노총 집회가 대국본 집회 측과 극단으로 치달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국본 집회 참여자 B씨는 경찰이 차별적으로 치안 권력을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B씨는 “민노총이 저 밑에서 차를 막고, 인근 주민·교통 질서와 상관없이 이기적인 집회를 하는데도 경찰이 해당 차선을 열어줬고, 심지어 뒤를 다 봐주는 느낌”이라며 “대국본 집회 측은 경찰이 양보하라며 육교 오르내리는 것까지도 통제하고, 일반적인 도로 통행까지 사사건건 명령하여 젊은 친구들도 버티기 힘들다는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찾길을 터졌다’는 지적에 대해 복수의 국민회의 지지자들은 야당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여론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 의원들과 진보당 인사 몇 명이 무더기로 경찰 지휘부에 항의 전화를 넣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지는 현장에서 10여 명의 경찰에게 관련 사항을 물었으나, 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경찰 지휘부에 물어봐라”고 답했다.

정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계엄 국조특위 시작부터 증인 싸고 신경전

45일 활동 돌입... 與 이재명·野 윤석열 증인 채택 방침
오늘 2차회의서 안건으로 채택... 野 일방 주도 불 보듯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45일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조사 목적의 ‘내란’ 표현을 두고 대립한 여야는 증인을 두고서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조특위는 7일 2차 회의에서 증인 채택 안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증인·참고인은 여야 간사 협의 후 특위 의결을 통해 채택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방승인 김여준 씨 등 2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최근

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이 대표가 지난 달 3일의 계엄 발생 2년 전부터 계엄 선포 우려를 나타낸 것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계엄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계엄 사태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에 지난달 참고인으로 출석해 체포조가 아닌 암살조 존재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국조특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세 사람은 나와야 하지 않겠나”며 “민주당은 항상 ‘도망가는 게 법인’이라 하는데 못 나올 이유가 있다. 국민에게 실제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국정조사를 하는 건데 피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차 회의에서 비상계엄을 선포

한 윤석열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단독 의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권 발부 및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측 국조특위 관계자는 “이 대표 등을 (국정조사에) 불러야 할 이유는 없다”며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 때 (이 대표 증인 채택 입장을 철회하는 대가로) 윤 대통령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려는 유지한 속셈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는 민주당 10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민의힘 측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다.

민주당 측 국조특위 관계자는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불발돼도) 국조특위는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주환 기자 jhoh@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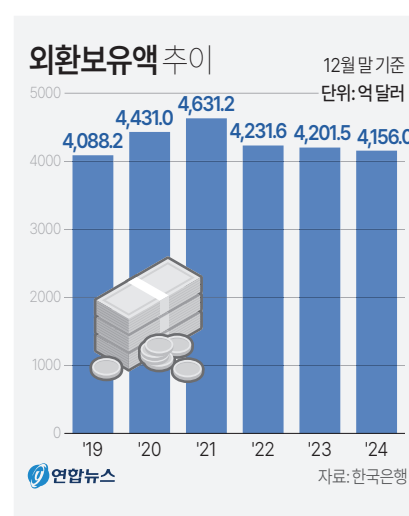
환율 폭등에도... 외환보유액 석 달 만에 늘어

금융기관 예수금 증가 영향
2억1000만 달러↑ 4156억 달러

지난달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치솟았음에도 ‘나라 곳간’으로 일컫는 외환보유액은 석 달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 수익과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연말 기준으로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외환보유액이 쪼그라들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4년 12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56억 달러로 전월 말(4153억9000만 달러) 대비 2억1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전월 대비 증가한 것은 작년 9월(+40억5000만 달러) 이후 3개월 만이다.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고공행진을 하면서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됐다.

미 달러화 강세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이 감소하는 것도 약재였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중 미 달러화지수는 약 2.0% 상승했다.

그럼에도 외환보유액이 늘어난 것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연말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고려해 보유 달러를 한은 계좌에 넣었기 때문이다.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수금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외화예치금 규모는 252억 2000만 달러로 전월 말(191억3000만 달러) 대비 60억9000만 달러 늘어났다. 여기에 한은 외자운용원이 외환보유액 운용을 통해 얻은 이익까지 더해지며 외환보유액 규모를 키웠다.

한은은 “미 달러화 강세로 인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감소,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분기말 효과로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증가하고 운용수익이 발생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윤승준 기자 syoon@skyedaily.com

한국전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국가전력망은 국가경쟁력

미래산업의 성장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기본이기에
한국전력은 전력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한국전력은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하루 1원 절약하기

01.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 1.08 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0.36 kWh/일 03. 세탁기 사용 시 세탁물은 모아서 사용하기 - 0.09 kWh/일

글로벌 에너지 리더 KEPCO
국가 미래 성장 기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

사이판·괌 중국인 관광객 ‘썰물’… 美·中 단절 현실로

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발길 뚫… 공항 입국심사도 엄격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아니면 중국인 입국 거의 없어
“中이 韓탄핵 찬성 시위 배후” 알려주자 공항경찰 ‘깜짝’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미국령 사이판과 괌 등 북마리아나 제도에 중국인 관광객이 사실상 실종되면서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결별 수준)이 본격화하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오후 사이판국제공항에서 만난 비번(off-duty) 교통안전청(TSA) 직원 A씨는 “중국인 관광객은 씨가 말랐다”고 귀띔했다.

이 직원은 정식 유니폼을 갖춰 입었지만 근무가 끝난 뒤 사건을 전제로 발언했다. 따라서 정식 인터뷰가 아니며 그의 발언은 미국 국토안보부의 공식 입장으로 간주할 수 없다.

TSA는 미 국토안보부(DHS) 산하 정부 기관이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외국인을

상대하는 첫 관문이자 미국 정부의 외국 인입국 정책의 현주소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일종의 풍향계와도 같은 최일선 정부 부처다.

이곳 직원인 A씨는 근무를 마친 뒤 기자와 만나 “최근 중국인을 찾아볼 수 없다”며 “내가 겪은 바로는 지금 들어오는 중국계 입국자들은 전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U.S. Citizen or Green Card Holder)”라고 말했다. 그는 “검문검색 강화 지시 내려와 중국인은 한 번 더 세세하게 보안 검색을 한다”고 최근 이민 심사 당국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조처는 바이든정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신호탄을 쏜 중공과의 무역전쟁은 바이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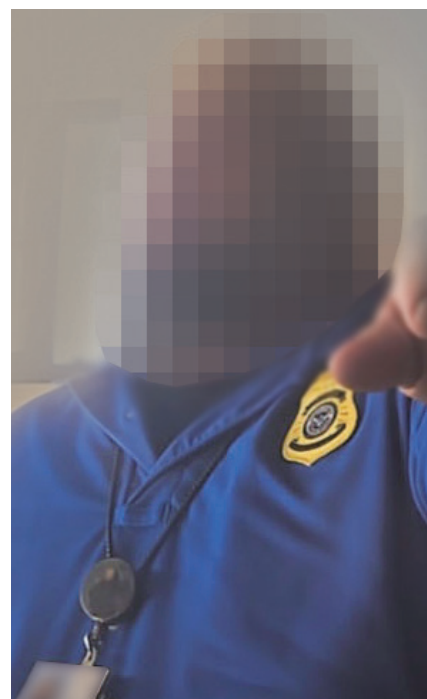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좌우를 떠나 중국공산당(CCP) 견제 기조는 똑같은 것이다.

A씨는 “(중국)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100% 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산 교역 물품은 100% 관세를 더 매기고 있다”며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를 물리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중국인과 교역 물품에 대해 추가 제재할 것은 분명히 예상할 수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가 다시 돌아오면 코로나19 시기에 이어 대(對)중국 제재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TSA 직원은 “지금보다 더 많은 제재에 나서는 게 트럼프의 ‘빅 스텝스(기본 정책 기조)’”라며 “어찌 보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 조건반사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코로나19로 관광업 침체 피해가 컸던 사이판에 불황을 타개할 조짐들이 잠시 감지됐었다.



미 국토안보부 소속 비번 직원이 11일(현지시간)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스카이드일리

하지만 지난해 10월 마중 간 견해 차이로 중국발 사이판 직항편이 중단되면서 커뮤니티에 돌았던 활기가 이내 사라지고

관광업이 급속히 냉각됐다.

중국에서 사이판으로 오려면 서울 등을 경유해야 한다. 상하이발 서울 경유 항공은 24시간15분, 캐세이퍼시픽은 최대 36시간5분짜리도 있다. 사이판은 서울에서 불과 4시간 남짓 거리이지만 중국발 체감 항공 시간은 서울에서 남미 또는 아프리카에 가는 시간만큼 길다.

미 해군기지 인프라와 건설업이 떠받치는 괌에 비해 사이판은 관광업이 경기 회복에 절대적 비율을 차지한다. 따라서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해진 미국 입국심사 당국의 기류는 관광업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사이판 중심도시인 가라판은 이날 낮 토요일인데도 인적이 드물었다. 외견상 중국인은 보이지 않았다. TSA 직원은 “중국계도 실상은 대만에서 온 관광객들”이라며 “대만은 미국과 동맹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상황에 대해서도 개인적 견해를 드러냈다. 기자가 한국의 현직 대통령

을 체포하려는 그룹의 배후에 중공이 있다는 의혹이 짙어 국민적 반대 시위가 일고 있다고 말하자 “4년 전 트럼프 상황과 같다”고 했다. 그러고는 “트럼프는 현재에서 물러난 뒤에도 2차례 탄핵 시도를 겪었다”면서 “한국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명료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국 국회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정당에도 친(親)중국 공산당 파가 잠입해(infiltrated) 거짓 탄핵을 주도한 의혹이 있고 중국인의 한국 시위 참가 등 명백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자 “중국인은 ‘도처에 있는 모기(mosquito in everywhere)’와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사이판공항에서 만난 또 다른 공항경찰대 관계자도 “대통령 관저 앞에서 찬반 시위가 벌어진다”는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고 했다. 배후에 중공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하자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라판(미국령 사이판)·허경기자
kh@skyedaily.com

“계엄령이 계몽령됐다”… 아스팔트 우파 세대 교체 이론 尹

11일 서울 도심 일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기각을 주장하는 20·30 세대의 목소리로 뒤덮였다. 광화문 일대에서 통상 진행되던 애국 우파 집회는 여의도·용산구 한남동 관저 일대로 지역을 확대하며 ‘윤석열 탄핵 무효·민주당 국헌문란’ 주장했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에서 ‘반대한민국 세력’ 선포된 것을 두고 ‘청년 세대가 계몽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국민혁명 정의가 주도하는 ‘광화문 국민혁명 대회’·신자유연대 주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밤샘 탄핵 반대 집회개신교계 구국 단체인 세이브코리아(Save Korea·대표 손현보 목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 집회가 11일 동시에 진행됐다. 해당 집회들은 20·30 청년 세대들의 자발적 참여가 대거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며 ‘아스팔트 우파의 세대 교체’라는 주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대로에서 개최됐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한 수만 명의 성도와 시민들이 모여 뜨거운 기도로 나라를 위한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이충원 기자

제로 진지전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된 광화문 대국본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300만 명이 참여했으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연사 중 청년 비율이 많이 증가했다. 같은

시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도 주말을 맞아 전날 대비 10배 가까운 인파가 모여 열린 분위기를 이어갔다.

광화문 집회에서 만난 60대 예비역 장성은 “젊은 친구들이 2주 전부터 태극기를 들고 직접 나오고 있다”라며 “믿을 수 없

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했다.

한남동 관저 일대를 지켜온 50대 시민은 “40~50%는 청년들로 언론에 비치는 찬성 집회 측은 100여 명도 안 될 정도로 미미하다”라고 했다.

이어 “발 디딜 틈 없는 인파가 한파 속에

광화문 대국민 집회 300만 몰려들어… 청년 비중 크게 늘어
한파에도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외치며 집회 열기 달궜

몰려들었다”라고 했다. 이 자리에는 연일 청년들 다수가 연사로 나왔다. 이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들은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과 ‘STOP THE STEAL(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이들의 발언에 호응했다.

전날 집회의 유의미한 점은 윤 대통령 대규모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렸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대로 일대에서 세이브코리아 ‘국가 비상 기도회’가 열린 것이다.

2만5000여 명이 오후 집회에 참여했으며 집회 참여자들은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강같이’ ‘탄핵 폭주, 내란 선포 STOP’ 등의 피켓을 들고 탄핵 반대를 외쳤다. 이 자리에는 손현보·유민석·박산수 목사가 서서 대표 설교를 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조배숙 의원·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을 비롯해, 조병세 ‘1776 연구소’연구소

장·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손영광 울산대 교수·김성원 그라운드씨 대표·블로거 책 읽는 사자가 서서 합심기 도와 공개 발언을 했다.

최근 복수 여론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도 속속들이 전해진다.

복수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까지 올랐으며 국민의힘 지지율도 40%대에서 보합세를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지지층 결속’을 넘어서 ‘청년층이 단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명의 여론 정치 평가는 본지에 “계엄령이 계몽령이 된 것”이라며 “앞서 겁에 질려 ‘반국가 세력’ 등 중북주사파에 대한 공분을 아무도 언급하지 못했을 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이를 알린 후 해당 리더십에 젊은 층이 대거 새로운 지지층으로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본지에 알려졌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한국전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국가전력망은 국가경쟁력

미래산업의 성장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기본이기에
한국전력은 전력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한국전력은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하루 1원 절약하기

01.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 1.08 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0.36 kWh/일

03. 세탁기 사용 시 세탁물은 모아서 사용하기 - 0.09 kWh/일

글로벌 에너지 리더 KEPCO

국가 미래 성장 기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

무너진 법치...尹대통령 구속 후 첫 조사 “안 받겠다”

서부지법 “증거 인멸 우려” 황당한 이유로 영장 발부
현직 대통령 헌정사 첫 구속... 대한민국 국격 와르르
尹측 구속적부심 검토 중... 내달 5일 전후 기소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구속됐다. 이날 곧바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공수처는 일주일 가량 더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기소 시점은 다음달 5일 전후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 중이라는 전언으로 향후 일정을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해 전날(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은경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는 “피

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곧장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뒤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체포 당시 200여 페이지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공수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해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검찰과 나눠 사용해야 하는 만큼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 연장해 최장 20일간 구속 가능하다. 공수처는 관·검사와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기 때문에 구속 수사하더라도 기소를 위해선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

검찰의 검사와 공수처 검사가 각각 얼마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각각 10일씩, 합쳐서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을 15일 체포한 공수처는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날짜만 계산하면 구속 만기일은 다음달 3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기각 처리한 기간을 제하면 실제 구속 만기

일은 다음달 5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피의자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사에게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 등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앞서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의 경우 공수처의 서류가 16일 오후 2시3분 서울 중앙지법에 제출됐다가 17일 오전 0시35분 반환됐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적부심 청구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할 경우 공수처 조사는 물론 검찰 기소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

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며 구속적부심이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가능성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져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변호인단은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오롯이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다”며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인치(강제 연행)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강제 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법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도 했다.

정수희 기자 jsh@skyedaily.com

설 연휴 6일 쉬는 기업 45%

300인 이상 기업 7일 이상 휴무 비중 더 높아
상여금 지급 기업 비율 감소... 액수 전년 수준

기업들의 이번 설 연휴 휴무일을 조사한 결과 6일이 가장 많았다. 휴무일과 성과급 양면에서 300인 이상 기업과 300인 미만 기업의 차이가 뚜렷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전국 5인 이상 602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설 휴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설 연휴는 주말(25일·26일)과 임시공휴일(27일)에 설 공휴일 3일(28~30일)이 이어지면서 설 휴무 실시 기업 중 45.0%가 6일 이상 휴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5일 이하 휴무가 25.0%로 뒤를 이었고 22.1%는 9일 이상 휴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기업은 ‘7일 이상 휴무’라는 응답이 42.2%로 300인 미만 기업(28.5%)보다 높았다. 5일 이하 휴무하는 비율은 300인 미만 기업(26.2%)이 300인 이상 기업(15.6%)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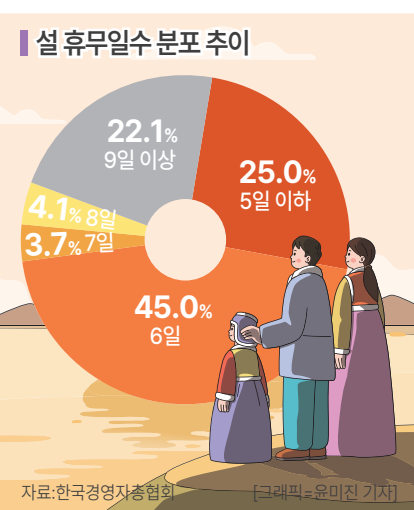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62.4%로 2024년(64.5%)에 비해 2.1%p 감소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기업(60.3%)보다 300인 이상 기업(78.8%)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설 상여금 지급 방식은 ‘정기 상여금으로만 지급’이 65.7%로 가장 많았고 ‘별도 상여금만 지급’이 24.4%로 뒤를 이었다. 응답 기업의 9.8%는 정기 상여금과 별도 상여금을 동시 지급했다.

올해 별도 설 상여금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응답이 81.7%로 높게 나타났다. 전년보다 많이 지급한다는 응답은 14.2%였고 전년보다 적게 지급하는 기업은 4.2%로 집계됐다.

한편 설 경기 상황(1월 기준)이 전년보다 악화됐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60.5%로 이는 최근 5년(2021~2025년) 중 가장 높았다. 설 경기가 전년보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4.4%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35.2%였다.

규모별로는 전년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이 300인 미만 기업(62.0%)이 300인 이상 기업(48.5%)보다 13.5%p 높게 나타났다.

올해 실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제품(서비스) 수요 부진’이 61.9%로 가장 꼽혔다. 다음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53.2%)·누적된 인건비 상승(44.6%)·높은 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24.1%) 순으로 나타났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공수처 분신 시도 남성 가족 “정치색 없었다”

이재명은 체포 안 하면서尹대통령만 체포에 항의
전신 3도 화상 위독... 경찰, 민주당사 방화범 추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 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한 시민 A(59) 씨가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다. 그의 가족은 A씨가 평소 정치색이 전혀 없었으며 온화한 성품으로 분신 소동을 일으키거나 방화 시도를 했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지에 밝혀왔다.

본지는 18일 서울 모처에서 A 씨의 가족 B 씨를 만나 사정을 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5일 오전 6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경찰 기동대에 의해 저지됐다.

A 씨는 관저 인근서 경찰에 “이재명 대표는 체포 안 하면서 왜 윤 대통령은 체포하느냐.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오후 8시5분쯤 경기 과천 정부 과천청사 인근 녹지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했다. 당일 오후 9시쯤 본지가 직접 찾은 사고 장소는 공수처에서 직

선거리 300여 m 떨어진 곳이었다. 당시 A 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다. B 씨는 “평소 정치색이 강하지 않았고 화물 탁송하는 일을 하여 집에 들르는 일이 거의 없어 A 씨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보수 성향의 정치색을 가졌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1차 분신 시도를 했을 당시 A 씨가 ‘가족이 없다’라고 해 가족은 경찰에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그대로 훈방 조치된 것으로 안다”라며 “경찰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조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언을 종합하면 대전에서 올라온 A 씨는 1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진 한남동 관저 인근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 커피 봉사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병원비 등 후원금과 응원 전화가 오고 있다. 일단 받기는 하였으나,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보관만 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만약 사실 정황과 맞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남성 1명이 분신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 않을 때 당연히 돌려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15일 오전 0시 10분쯤 시민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이를 A 씨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본지는 수사 상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영등포서에 직접 찾아가았으나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일체 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혜원 기자 hjyang@skyedaily.com

에너지의 내일! 에너지의 미래!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만나요!

무한한 에너지의 시작, SMR 기술

삶을 지켜주는 경제적 에너지

한계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원자력 에너지

“공수처에 더 말할 게 없다”… 尹, 출석 요구 모두 거부

(4차례)

與도 “특혜 바라지 않지만 기본 방어권마저 박탈” 맹비난
 金여사 면회까지 막아… 변호인 외 일절 접견 금지 조치
 “수사기관·사법부, 다음 정권에 줄서기 안달” 강력 규탄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했다. 공수처는 강제 구인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언급하며 수사 기관·사법부 등을 “헌정 질서 유린 장본인들”이라고 규탄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라 해서 특혜를 누리서도 안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부당히 박탈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 이 단 15자가 서울서부지법이 내놓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다. 공수처 수사권 문제·체포영장 적법성 문제·체포 과정 위법 문제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주장한 수많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단행으로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관저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인가”며 “조기 대선에만 눈 멀어 있는 거대 야당·별찌부터 다음 정권에 줄 서기 위해 안간힘 쓰는 수사기관들·권력 눈치만 보는 사법부,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들”이라고 공수처·법원 등을 규탄했다.

20일 공수처는 구속 후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한 윤 대통령 강제 구인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법률·판례에 따라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시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치소 방문 조사도

구속기간	구속기간 연장
1월 15일 체포	1차 구속기간 1월 19일~1월 28일 연장 신청·허가시 ~2월 7일(전망)
16일 불응	체포적부심사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반환받은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 최장 20일에서 4일 더 연장된 셈
17일 불응	조사실로 강제구인*
19일 구속 불응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 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 근거 (2013년)
20일 불응	강제구인에도 전술거부시 조서가 증거로서의 가치 없을 수 있음, 수사보고서 형태로 기록에 붙여 법원 단계로 이송
	구치소 방문조사
	검토 중, 대면 조사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강제구인 검토에 무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구속 기간 연장도 고려 중이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은 28일까지다. 법원이 연장을 허가하면 구속 기간은 내달 7일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16·17·19·20일 출석하라는 공수처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체포·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건 관찰 위반이라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왔다.

공수처의 ‘변호인 외 접견 금지’ 결정을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19일 윤 대통령에게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접견 금지’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91조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 중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권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결정을 할 때는 국

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단 하나의 사유로 내놓은 증거 인멸 염려조차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는 20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결해 석방을 촉구했다. 19일 구속된 윤 대통령은 당일 신체 검사를 마친 뒤 수용복을 입고 머그잔을 찍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된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與 “野서 서부지법 사태 폭도 낙인”… 정치적 이용 비판

정청래 “폭도들 끝까지 추적해 엄벌 처해야”

권영세 “반대 목소리 싹 자르려 엄벌 으뜸장”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현안 질의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2의 내란 사태”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을 살펴보지도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뜸장을 놔다”며 “반대 목소리의 싹을 자르려는 의도이자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워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과 4범·12개 형

의·5년 재판만큼 일생을 무질서하게 살아온 이재명이 질서를 논하는 것은 기만을 넘겨선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행태는 모든 권력을 행정·입법·사법·법원 구분 없이 총통의 손 안에서 통합해야 한다는 나치독일의 법학자 에른스트 후버의 논리를 떠올리게 한다”고 직격했다.

20일 국회 법사위·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현안 질의가 열렸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해 법원 경내로 침입해 소화기를 던져 법원 유리·집기를 부수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판사



윤석열 대통령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 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도 찾았다”며 “대법관들은 30년 이상 법관을 하면서 이번 사태를 한 번도 없었던 미증유 사태라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물적 측면으로 현재 6·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직원들은 욕

상하지로 대피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직원은 없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관 개인이나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 전면 부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서

부지법을 습격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심지어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했던 차은경 판사를 찾아내기 위해 판사 사무실까지 난입한 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제2의 내란 사태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폭동에 관여한 폭도들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3시에 서부지법에 진입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6시께 이를 진압했으며 4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직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설 차례상 전통시장
 대형마트보다 13%↓

서울에서 설 차례상을 준비할 때 전통 시장을 이용하면 22만4000원, 대형마트는 25만8000원이 들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농수산물)는 20일 대형마트·전통시장·가락시장(가락물) 총 2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 차례상 치립 비용’(구매 비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사는 명절(설·추석) 차례상 치립에 수요가 많은 주요 성수품(6~7인 가족 기준) 34개 품목에 대한 구매비용을 조사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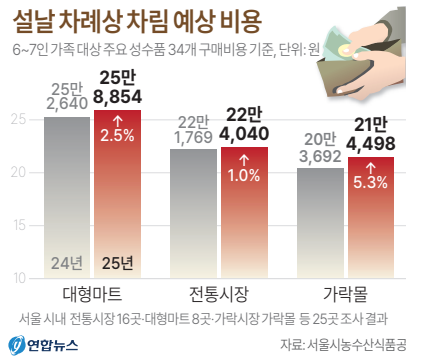
조사 결과 올해 전통시장 구매 비용은 22만4040원, 대형마트 구매 비용은 25만8854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2.5% 상승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비해 13.4%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과일(배·귤·감) △임산물(대추·밤) △나물(고사리·도라지) △채소(시금치·대파·알배기배추) △수산물(부세·다시마·동태) △축산(한우 양지·돼지고기·닭고기) △가공식품(두부·맛살·약과)이 저렴했다.

반면 대형마트는 △과일(사과) △채소(무) △축산(한우 우둔살) △양곡(쌀) △가공식품(밀가루·다식·청주·식혜)이 전통시장에 비해 저렴했다.

문영표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은 “설 명절 맞아 특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다면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되고 결제액의 최대 15%를 환급받을 수 있어 전통시장·가락물에서 더 알뜰한 장보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한국전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국가전력망은 국가경쟁력

미래산업의 성장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기본이기에
 한국전력은 전력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한국전력은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하루 1원 절약하기

01.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 1.08 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0.36 kWh/일

03. 세탁기 사용 시 세탁물은 모아서 사용하기 - 0.09 kWh/일

글로벌 에너지 리더 KEPCO

국가 미래 성장 기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

美 전기차 의무화 폐지 현실로... 車·배터리 업계 긴장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 멕시코·加 관세 25%
업계선 2월부터 관세 시행에 시간 벌어... 일단 관망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국내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당장 큰 타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황을 보고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기존에 예고했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전기차 보조금 철회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추가 25% 부과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나는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나

는 즉각 미국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무역 시스템 점검을 시작하고 우리 시민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은 이전부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부터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큰 전기차 보조금 폐지도 이미 예상된 조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관세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이전 발언과 다르게 2월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관세 부



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 또한 대응할 시간을 벌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고 캐나다·멕시코 관세를 올리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와 전기

차 부품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은 전기차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수출국이다. 관세 부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전체 전기차 수출 또한 떨어질 위험이 있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미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살린 ‘니어쇼어링’ 업계로 주

목받았던 만큼 관세 부과에 따른 타격을 것으로 예상됐다.

기아가 멕시코 몬테레이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차 부품 업체들 역시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은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국 기업들은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 또한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업계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전기차 배터리 업체 중 캐나다나 멕시코에 공장을 지은 기업은 생각보다 적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전기차배터리협회 관계자는 “현재 캐나다·멕시코에 공장을 지은 기업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생각하는 만큼 피해를

입을 기업이 많지는 않다”며 “정책 여파 또한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기아의 경우 이전부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2025년 신년회에서 “우리만의 이슈가 아니고 모든 메이커들의 동일한 이슈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면 될 것 같다”며 “미국·멕시코·한국 3곳 공장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정책에 맞춰 포트폴리오와 모델 믹스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송 사장의 이전 입장과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8인 체제 현재 ‘이진숙 탄핵 심판’ 내일 선고

5개월 만에 정족수 갖춰

계류 40건 결론 내리기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추며 5개월 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등 계류 중이던 40여 건의 결론을 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2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해 8월2일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인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후 174일 만에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특히 이날 선고는 작년부터 줄줄이 접수돼 현재에 계류 중인 탄핵 심판 사건 중 처음으로 현재에 결론을 내리는 건이다.

같은 날 지난 5개월간 선고 못 한 40여 건에 대한 결론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



(오른쪽부터) 정형석, 김형두, 정계선, 문형배, 조한재, 이미선, 정미중,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 및 시무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는 작년 10월 재판관 9명 중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6인 체제’가 되면서 심판을 선고하지 못하고 있었다.

헌재법은 재판관 9명 중 7명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가 재판관들의 퇴임 직전 이 위원장 측의 가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규정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 심리는 문제없이 진행해 왔다.

현재는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다.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와

추천한 조한재·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현재는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따라서 심리 정족수 7명 조항을 충족하게 돼 현재가 5개월 만에 선고에 나선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의 이날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눈여겨보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로 이 위원장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야당의 국가 기능 마비 시도라는 주장을 들고 있다.

정수희 기자 jsh@skyedaily.com

尹체포에 항의 분신... 50대 끝내 사망

시청역 인근 분향소 물색

유족에 보조금 전달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한 50대 남성 A(59)씨가 20일 사망한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의 공로를 기려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20일 이두호 시민단체 자유와연대 공동회장 겸 사단법인 자유수호국민운동 이사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같이 알리며 “2호선 시청역 인근에 늦어도 내일(21일) 목표는 오늘(20일) 저녁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의 불법 사태로 울분을 토하다 분신했기 때문에 응당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망자가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밤샘 집회를 지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 커피 봉사 등을 한 것으로 안다”며 “가족 장례 절차와 별개로 시민단체 자격으로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보조금을 모아 유가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남성 1명이 분신을 시도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신3도 화상을 입어 과천시 인근 응급실로 이송돼 수술 후 치료를 받았다.

그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사망했으며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자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초교 부근에서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경찰 기동대에 의해 저지됐다.

지구에 안겨진 A씨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 하니 화가 나서 그랬다”고 분

신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이후 오후 8시 5분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 녹지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했다.

유가족은 본지에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사건 이후 A씨가 생전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커피 봉사 등을 했다는 목격담을 SNS에 공유하며 그에 대한 후원과 응원 및 지지의 목소리를 이어왔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에너지의 내일! 에너지의 미래!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만나요!

삶을 지키주는 경제적 에너지

한계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원자력 에너지